

## 경제산업성, 전력수급긴급대책본부 「하계전력수급대책」 발표

동일본대지진으로 도쿄전력, 토호쿠전력 관내의 전력공급능력의 대폭 감소에 따른 계획정전으로 국민생활과 산업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끼침. 이에 경제산업성은 다가오는 여름철의 전력수급 팽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전력수급긴급대책본부에서 「하계전력수급대책」을 검토·정리하여 발표함

### □ 전력수급대책의 기본적인 관점

- 전력제한이 지진피해로부터의 부흥과 일본경제의 재출발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
  - 특히 부흥의 기반인 산업생산·조업활동에의 영향을 최소화
  - 노사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준비 진행
  - 토호쿠지역을 중심으로 한 피해지역에의 최대한의 배려
  -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올여름의 수급대책에만 그치지 않고 장래를 내다보는 시책 마련
- 전력대책수급골격(案)에 제시된 공급면에서의 積増을 최대한으로 실시한 후에 발생하는 수급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수요억제 목표를 설정

- 수요억제책으로는 사용최대전력 억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사전에 성수기·시간대 억제범위를 제시하여, 수요처가 조업시간의 변경과 휴업·휴가의 장기화, 분산 등 창의적인 고안으로 계획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
- 수요면의 대책에 대해서는 대규모수요처, 소규모수요처, 가정부문 별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대책을 구체화
- 계획정전은 전력수급대책을 확실하게 실시함으로 인해 불실시상태를 유지하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안전대책으로서 자리매김하여 만약의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함
- 전력수급에 관계되는 제약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진피해로부터의 부흥과 일본경제의 재출발에 이바지하도록 올 여름 이후의 수급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함

## □ 올 여름 전력공급 전망과 수요억제 목표

- 도쿄전력과 동북전력의 공급능력은 피해를 입은 화력발전소 복구, 노후화로 장기정지중인 화력발전소 재가동, 가스터빈 긴급 설치, 자가발전 전력구입 확대, 양수발전 활용 등으로 전력증가 도모
- (공급능력전망) 도쿄전력에서는 500만kW의 추가전력확보 가능으로 총 5,380만kW(7월말), 토호쿠전력에서는 50만kW의 추가전력 확보 가능으로 1,370만kW(8월말)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음
- 최소한도로 필요한 전력수요억제율은 도쿄전력(필요전력량 6,000만kW) 및 토호쿠전력(필요전력량 1,480만kW)이 각각 ▲10.3%, ▲7.4 %

- (수요억제목표) 여진의 영향과 노후화된 화력발전소의 주야간 운전 등의 기술적 리스크를 감안하여 도쿄·토호쿠전력 관내 전역에서 목표로 하는 수요억제율을 ▲15%로 함
- 대규모수요처, 소규모수요처 및 가정의 부문별 수요억제목표는 균일하게 ▲15%로 함

## □ 수요처의 전력수급대책

### 1) 대규모수요처의 전력수급대책(계약전력 500kW이상의 사업자)

- (기본방침) 대규모수요처는 구체적인 수요억제대책에 대한 계획 수립
  - 정부는 대규모수요처의 자발적인 노력을 존중하면서 실효성과 공평성을 담보하는 보완조치로 전기사업법 제27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 추진
- ※ 전기사업법 제27조 : 전기공급부족이 국민경제와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제산업상이 강제로 전기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. 시행령에 따르면, 500kW이상의 전력공급을 받는 대규모수요처 등이 제한대상
- (대처방안) 조업·영업시간의 조정·변경 및 공휴일·하계휴업의 분산화대책 등을 관련기업과의 협력으로 추진하여 생산량 감소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 (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「전력대책자주행동계획」에 4월말 현재 637개사 참가)

### 2) 소규모수요처의 전력수급대책(계약전력 500kW미만의 사업자)

- (기본방침) 소규모수요처는 구체적인 억제목표와 각각의 사업형태

에 적합한 형태의 구체적인 대처방안에 관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·공표함

- 정부는 소규모수요처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“에너지절약 실천 계획 표준서식”을 활용한 절전에 대한 대처 등의 조치강구
- (대처방안) 조명·공조기기 등의 절전, 영업시간 단축, 여름휴업 설정·연장·분산 등의 구체적인 노력을 포함하여 자주적인 계획의 사내 게시 및 정부관련 사이트에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표
- 일본상공회의소 등은 전력수급대책에 부응하기 위해 “에너지 절약 실천계획 표준서식”을 참고로 수요억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책정을 검토중

### 3) 일반가정의 전력수급대책

- (기본방침) 절전대책 메뉴를 활용하여 의식적으로 절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대처함
- 정부는 일반가정의 절전을 촉진하기 위해 “일반가정 절전대책 메뉴”를 주지시키고 절전교육 등을 통한 조치강구
- (대처방안) 일반가정의 전력계약용량(암페어)을 낮추고 초·중등학교 수업 및 여름방학 과제로 「절전」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각 교육위원회 등에 주지시켜 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

### 4) 절전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

- (기본방침) 국민 각계각층에 적극적인 계몽활동을 실시하여 절전에 대처하는 움직임을 대국민 캠페인으로 전개

- 신문, TV,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절전 동참 요청
-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전력 수급상황 및 예상 전력수요의 「시각화」를 도모하고 국민 각계각층에게 절전을 위한 동기 부여를 철저하게 도모
- 전력수급 차질로 계획정전 등의 우려가 높아진 경우 「수급핍박경보(가칭)」를 발동하여 긴급 절전요청을 실시하면서 계획정전의 가능성을 주지시킴
- 대형행사 주최자에 대해 전력사용 절정기간·시간대를 피해 행사를 진행하도록 일정조정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요청

## 5) 정부의 절전대책

- 「정부의절전실행기본방침」에 따라 부처별로 절전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용최대전력을 15%이상 억제. 사용최대전력의 억제에 그치지 않고 성수기 기간·시간대를 통해 사용전력억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
- 산하 독립행정법인 및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절전계획 수립 요청

## 6) 안전대책으로서의 계획정전

- 계획정전은 이미 「不 실시 원칙」상태로 전환했지만 만약 실시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개선을 도모(1일 수차례정전 회피, 정전 시간 단축)
-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변전소의 운영개선 등에 의해 정전의 영향을 최대한 완화하는 등의 조치강구

## □ 올 여름이후의 전력수급대책

- (기본방침) 전력수급대책은 향후 에너지정책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원자력발전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면서 수급 양면에서 대책을 강구하여 올 여름보다는 수급상황을 개선
  - (대처방안) 공급측면에서는 화력발전소 복구·가동·증설, 긴급설치 전원 신설 및 자가발전 활용 등에 치중하고 화력발전소 증설을 앞당김으로서 화력발전소의 공급력 증강함. 또한, 지역간 연계설비 증강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분산형전원 및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처
  - 수요측면에서는 스마트계량기의 도입 등에 의한 수요측의 에너지 이용 최적화를 도모하면서 절전을 촉진하는 제도도입을 검토하고 절전에 도움이 되는 기기설비의 도입촉진 등 에너지절약을 더욱 추진
- ※ 스마트계량기 : 전력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표시하여 전력소비 억제효과 유발. 京都大學은 OMRON, 大和하우스 등과 공동으로 전류파형에서 에어컨,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수콘센트 「스마트탭」 개발. 한편, AB 리서치사에 의하면 2014년 이전에 전세계적으로 스마트계량기 설치대수는 1억 8천만대 예상

자료 : 「夏期電力需給対策」, 2011년5월13일, 經濟産業省 電力需給対策本部